

##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 국민 신고 안내 및 적극 방제 지속

- (11.27~12.3) 지자체 신고 78건, 발생 28건 / 민간업체 방제 포함시 전체 발생 42건
- 집중점검·방제기간 3주차 운영 결과(누적 85% 점검 완료), 총 9개소 발생 확인·방제
- ▲집중점검·방제 마무리 ▲열풍기 방제사업 등 해외유입차단 ▲가정용 살충제 신속 도입 등 대국민 안내 및 적극 점검·방제 지원 지속

- 정부는 12월 5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 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28)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 <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개요 >

- ▶ (일시·장소) '23.12.5(화) 14:00 ~ 15: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 (참석기관) 국조실(주재),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및 17개 시도

-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7~12.3)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시 전체 42건(전주 대비 △28건)이다. \* 민간 대표 방제업체 조사 결과(연간 빈대 방제작업 건수 90% 차지)

- 또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11.13~12.8)’ 3주차(11.27~12.3)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3.5만개소(25%) 시설을 점검하였고(누적 85%), 이중 9건(전체 발생 42건에 포함)의 발생사례를 확인해 즉시 방제하였다.

\* 숙박시설, 목욕장, 노숙인 시설 등

-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빈대 발생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이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의 결과이므로,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

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하였다.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및 방제 참여를 위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 집중점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통한 주간단위 발생·방제 현황을 지속 공개하여 국민적 관심을 이어나가는 한편,

-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빈대 정보 홍보를 위한 QR코드 표출을 오늘(12.5일)부터 실시하고, 빈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셋째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을 시작하며, 공항버스·KTX 등 공항 관련 시설에 열풍기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인천공항 내 방제센터 마련, 열풍기 10대 설치 예정(12.3주~, T1 6대 / T2 4대)

- 또한, 정부는 내성 문제가 없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방역용 살충제(8개 제품)를 긴급승인한 데 이어(11.10), 최근 가정용 살충제 1개 제품에 대해서도 변경승인을 완료(11.30)하여 빠르면 금주중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이번에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내를 포함하여, 새로 개시되는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등 신규 대책 내용 역시 정보집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빠짐없이 안내할 것”을 당부하며, “빈대 대응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방제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이어 홍보와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성현국	(044-200-2293)
<총괄>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혜빈	(044-200-2289)
	질병관리청	책임자	과장	여상구	(043-719-9050)
	위기대응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홍	(043-719-9373)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장	엄현숙	(044-205-6150)
<공동>	보건의료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최기수	(044-205-6157)
	환경부	책임자	과장	권병철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기대정	(044-201-6828)

# 참고 | 반대 발생현황 (총 42건)

\* 11.27~12.3 수지

## 1] 지자체 등 정부 신고 현황

시도명	총계	신고발생	총신고 (G+H)	전주적 (A)	금지 (B)	발생 시설 (개소)												
						숙박	목욕탕 찜질방	학교 기숙사	가정집	유원지 유치원	교원	주요시설	문화	교통	의료 시설	기타		
총계	신고발생	584	506	78	4	4	3	44	10	7	1	1	1	0	3			
서울	신고발생	225	207	18	1	2	2	6	-	5	1	-	-	-	1			
부산	신고발생	5	5	-	-	-	-	-	-	-	-	-	-	-	-			
대구	신고발생	9	9	-	-	-	-	-	-	-	-	-	-	-	-			
인천	신고발생	38	33	5	1	-	-	3	-	1	-	-	-	-	-			
광주	신고발생	2	2	-	-	-	-	-	-	-	-	-	-	-	-			
대전	신고발생	28	25	3	-	-	-	2	-	-	-	-	1	-	-			
울산	신고발생	9	5	4	-	-	-	4	-	-	-	-	-	-	-			
세종	신고발생	5	5	-	-	-	-	-	-	-	-	-	-	-	-			
경기	신고발생	179	146	33	1	1	-	19	8	1	-	1	-	-	2			
강원	신고발생	9	4	5	-	-	-	2	2	-	-	-	-	-	-			
충북	신고발생	30	27	3	-	-	-	3	-	-	-	-	-	-	-			
충남	신고발생	13	12	1	-	-	-	1	-	-	-	-	-	-	-			
전북	신고발생	-	-	-	-	-	-	-	-	-	-	-	-	-	-			
전남	신고발생	15	11	4	1	1	-	2	-	-	-	-	-	-	-			
경북	신고발생	1	1	0	-	-	-	-	-	-	-	-	-	-	-			
경남	신고발생	12	10	2	-	-	-	2	-	-	-	-	-	-	-			
제주	신고발생	4	4	-	-	-	-	-	-	-	-	-	-	-	-			

## 2] 민간업체 직접 신고 현황

구분	10.31~11.26. 누적	11.27~12.3.
대표업체 신고·방제건수	122	29(15건 지자체 건수와 중복)

# 붙임 | 해외구매대행(직구) 살충제 구매 관련 카드뉴스

**해외직구하는 살충제 안전한가요?**

국외에서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제품보다 더 좋을 것 같아!

무분별한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안전한 살충제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면?

살충제 해외직구 구매 대행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승인을 받은 제품이 더 안전성이 높아요!**

국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거나 승인받은 제품이 해외 제품보다 안전성이 높습니다.

호몰가미 영양이 큰 스프레이 형태 제품에 대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

CMIT 등 보조제 성분의 경우 미국 등 국외에서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스프레이 제품에 첨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

승인·신고변경

**해외구매대행 기업(판매자) 준수 사항**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가정용이나 방역용 살충제는 영적인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

신고·승인번호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제품 대상

확인 또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대·과장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비파라오 살충제를 반대용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

**해외구매대행 제품 구매 시 유의사항**

살충제 등 인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반드시 표시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최소한량 사용

특히 살충제는 잘못 쓰거나 많이 사용하면 매체에 내성이 생기기나 오취와 인체에 해를 줌

**해외구매대행 대신 인증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ecolife.me.go.kr →

안전기준 확인

**해외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도 많아요!**

안전한 한국인증살충제(승인·신고·승인번호)와 함께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조사 결과 국내에서 금지된 물질이 다수 검출했습니다.

44% 조사제품의 44%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 (90개 중 40개 제품이 안전기준 위반)

스프레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CMIT 성분,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다수 검출

미국 영구 일본 등에서 제조한 제품도 안전기준 위반 사례 발생